이재명 대표, 민생 드라이브로 사법리스크 정면돌파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민생 협력"…영수회담 거듭 촉구
"민생 우선 입법·예산안 처리"
부자감세 등은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연일 민생 관련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의해 조성되는 불리한 정국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하면서 유튜브로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지난 7일 경북 포항을 찾아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대구·경북(TK)행에 나서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좀처럼 자신을 향해 불거진 사법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대신 최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어르신께 한 달에 40만원씩 드리는 것은 꼭 하고 싶다"라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민생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인상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 먼저'의 기치를 들고 나선 '이재명 민주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및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는 "급하지도 않은, 영업익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超)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부자감세' 비판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 대표의 민생 드라이브 기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태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시 불붙은 국힘 당권싸움

새 비대위 출범으로 경쟁 가열
김기현·안철수 본격 몸풀기
정진석·권성동 도전 가능성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리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당권 경쟁은 추석연후 이후 '비대위 시즌2'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불붙을 조짐이 12일 나타나고 있다.

원내에서는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일단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간 상태다.

두 의원은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과 함께 공부 모임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행사 때마다 의원 수십명을 모으며 세를 과시하는 등 당권 레이스에 이미 뛰어들었다.

이들은 앞으로 자칫 '세몰이'로 비칠 수 있는 대규모 모임 주최는 당분간 지양한 채 정기 국회와 국정 감사에 집중하는 한편 소규모 강연회나 당내 스킨십 강화 등으로 전대 레이스에 임할 방침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수습과 정상화를 시급한 책무로 안게 됐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은 살아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여부를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모르죠, 뭐. 내가 비대위원장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해내면 당원들이 또 제대로 전대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을지도"라고 여지를 남겼다.

당 내홍의 책임을 지고 5개월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잠시 휴식 기간을 거쳐 차기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 사퇴 선언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 "당분간 좀 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친윤 그룹 일각에서 원내대표 합의 추대 대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잠재적 당권주자로도 분류된다.

이밖에 원외에 머무는 나경원 전 의원과 현재 내각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및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약자복지'에 시선 둔 윤 대통령 추석행보…지지율 회복할까

"사회적 약자 넉넉하게 보듬겠다"
법안·예산·정책도 약자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현장 행보를 지속했다.

수시로 등락하는 국정 지지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다 보면 결국 진정성이 통할 것이라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꾸준히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율을 겸손하게 받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부족한 걸 채워야 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강도 높은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단행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 연휴 직전에 내놓은 일성은 '약자 복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추석 메시지에서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뒤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도 했다.

이 약자 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돼 가고 있다.

대선 당시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앞으로 일정과 메시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과 예산, 정책 측면에서도 약자 복지에 더 방점을 찍게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지율과 무관하더라도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어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대통령 국정지지율 0.3%P 올라 32.6%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64.6%
정당은 민주 48.4%·국힘 35.2%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선, 부정평가는 64%선을 각각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긍정평가는 소폭 오르고 부정평가는 소폭 내린 결과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8일(9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6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32.6%(매우 잘함 18.9%, 잘하는 편 13.8%)로 집계됐다.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8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반등하면서 33.6%까지 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32.3%로 하락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0.3%포인트 낮은 64.6%(잘 못하는 편 9.7%, 매우 잘 못함 54.9%)로 조사됐다. 긍·부정 차이는 32.0%포인트로, 1주새 0.6%포인트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학생(6.9%P↑), 무직/은퇴/기타(5.9%P↑), 국민의힘 지지층(4.8%P↑), 보수층(4.6%P↑), 20대(4.5%P↑) 등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대구·경북(2.5%P↑)에서도 지지율이 다소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9.9%P↑), 부산·울산·경남(8.0%P↑), 진보층(3.7%P↑), 40대(2.4%P↑)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